

AI산업 키울 ‘물·에너지’… 대구서 미래 인프라 해법 모색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개최
세계 50여개국 1만여명 참가
한수원, 주최기관으로 첫 합류

기후위기 심화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첨단산업 확대로 안정적인 물·에너지 공급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래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장이 대구에서 막을 올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11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고위급 정부 인사, 국제기구 관계자, 물 분야 전문가 등 약 1만 명이 참가한다.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인 국제물주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최 기관으로 처음 합류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물과 에너지의 연계 논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21일 경남 거제시 하천 범람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현천을 찾아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50년간(1970~2021년) 발생한 기후 재해의 84%가 홍수, 가뭄 등 물과 관련된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형태가 물 문제라는 의미다. 여기에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급격히 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산업을 움직일 막대

한 양의 물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올해 행사는 ‘물·에너지·인공지능: 우리의 미래를 지키다(Water, Energy, AI: Securing Our Future)’를 주제로 정했다. 물, 에너지, AI가 개별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서

로를 지탱하며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위급 회의, 학술·정책토론회, 비즈니스 미팅 등 약 50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주요 토론회(세션)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인공지능·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하는 물·에너지 기반시설’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물·에너지 인프라 체계, 수력발전의 디지털 전환, 양수발전과 재생에너지 연계 방안을 다룬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요소인 ‘초순수’ 생산 및 산업폐수 재이용 등 현장 중심의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또 ‘인공지능 기반 물·에너지 관리의 지능화’ 부문에서는 AI가 방대한 물 데이터와 에너지 소비 유형을 실시간 분석·예측하는 첨단 기술을 다룬다. AI 기반 스마트 하수처리,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난 대응, 누수 저감 기술 등 AI를 활용한 고도화된 수자원 관리 방안이 모색된다.

글로벌 협력 및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무대도 대폭 확대된다. 각국 장관급 인사가 모여 전 세계 물 문제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워터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실행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물 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포럼도 마련된다.

전시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물관리 현황과 최신 기술이 공유되며, 초순수 필터·폐수처리·정밀 측정장비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동관’이 운영된다. 신기술 공개 행사(오픈 이벤트)를 통해 AI 기반 상수관망 진단 로봇, 먼진형 물탱크 등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도 대중에 첫선을 보인다.

이 외에도 도시홍수 저감, 맨홀 사고 및 지반침하 예방, 과불화화합물 제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속 물 현안 세션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청소년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길거리 공연 등도 함께 펼쳐진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통해 마련된 물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인공지능을 만나 더욱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으로 발현될 것”이라며 “첨단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물·에너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중 농업협력위 재개… K-푸드 수출 확대

농식품부, 5개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한-중 수의·방역 정례협의체 제언

한국과 중국 간 농업협력위원회가 8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 고위 관료가 마주하는 농업협력위 개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이래로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차관이 이달 6~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농업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농업 외교 행보에 나섰다 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중국 농업농촌부 및 해관총서의 고위급 인사와 만나 양국 농무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현지에서 진출해 있는 K-푸드 수출기업들과도 면담했다.

7일에 개최된 제19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총 5개 의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학기술 기반 농업 혁신 ▲기후변화 대응 ▲청년 농업인 육성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보전 등이다.



김종구(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농업협력위원회에서 장바오 평 해관총서 부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의제 선정에는 양국 공통의 관심사 및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 등이 반영됐다. 양측은 주요 정책을 소개한 뒤, 공동 대응 및 협력을 통한 정책적 시너지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김 차관은 중국 농업농촌부의 장쩌리 부부장과 가진 면담에서 스마트 농업기술 및 가축방역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한-중 수의·방역 정례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농업기술 관련 해 연구소·기업 등 기관 교류를 활성화하

고 초국경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및 방역 정책을 정기적으로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장 부부장은 긍정적 반응을 내보이며 화답했다.

해관총서의 장바오평 부서장 면담에서는 작년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국산 감 수출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0월 중 우리 감 수출단지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산자원공단, 불법어구 철거선 안전망 강화

해수부와 합동 안전점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서해 불법어구 철거작업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안전강화 훈련에 나섰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남광주 통합특례시 여수 우두리항에서 불법어구 수거철거전용선 3척(청정바다 1·2·3호)에 대한 안전점검이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 합동으로 실시됐다. 선원들 대상의 비상훈련·안전교육도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불법어구 철거작업에 투입

되는 청정바다호의 선박 전반의 안전상태와 주요 장비의 이상 유무,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 운항 및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선원 대상 교육은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전문인력이 맡았다. 경비단은 불법외국어선 조업 행태 및 불법어구 제거 작업 시 안전확보 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의 안전보건실은 화재·밀폐공간 사고 등 비상상황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 시 작업중단과 비상연락,

신속대피 및 구조·응급처치 등 상황별 대응절차를 숙지하도록 했다.

공단은 연내 예정인 본격 철거작업에 앞서 작업 전·중·후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생태계 회복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불법어구 수거철거전용선(감척된 어선의 용도 변경)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신속한 현장 투입으로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인들의 어획 환경 개선 효과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제주형 에너지 자족마을 조성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등 실증 추진

마을에서 직접 만든 친환경 전기를 인공지능(AI)이 관리하고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쓰는 ‘에너지자족형 마을’이 제주에 조성된다. 주택 난방의 전기화와 전기차 보급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제주의 이점을 활용해 주거·이동·농업 분야를 아우르는 분산에너지 혁신 모델 실증이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자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분산에너지 실증 사업을 제주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말

현장 실사를 거쳐 향후 5년간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모델은 한림읍 또는 대정읍 일대 2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제로 주택단지’다. 각 주택의 태양광, 공기열 히트펌프,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AI 가전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한국형 크라켄(AI 기반 에너지 관리) 모델’이 적용된다. 개별 가구에서 쓰고 남은 전력은 마을 내 이웃과 나누어 쓰고, AI가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낮추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은 지난 7일 체코수소협회와 ‘원자력 청정수소’ 용역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한수원

한수원, 유럽 원자력 수소시장 진출 ‘시동’

체코수소협회와 용역 성과공유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수소협회(HYTEP)와 손잡고 원전 전력을 활용한 ‘원자력 청정수소’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수원은 지난 7일 경북 경주 황룡원에서 체코수소협회와 ‘용역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2025년 9월부터 11개월간 진행된 ‘체코 및 유럽연합(EU)의 원자력 수소법·제도·정치 환경 분석 용역’의 최종 결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한수원은 그간 체코를 거점으로 유럽 청정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2024년 체코 현지에서 ‘한-체코 수소 협력 포럼’을 개최한 이후 체코수소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현지 최대 수소 콘퍼런스인 ‘Hydrogen Days’에 2년 연속(2025~2026년) 참가하는 등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알레스 두체크 수소협회장은 “이번 협력 성과가 체코 현지에서 원전 전력과 연계한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 개발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